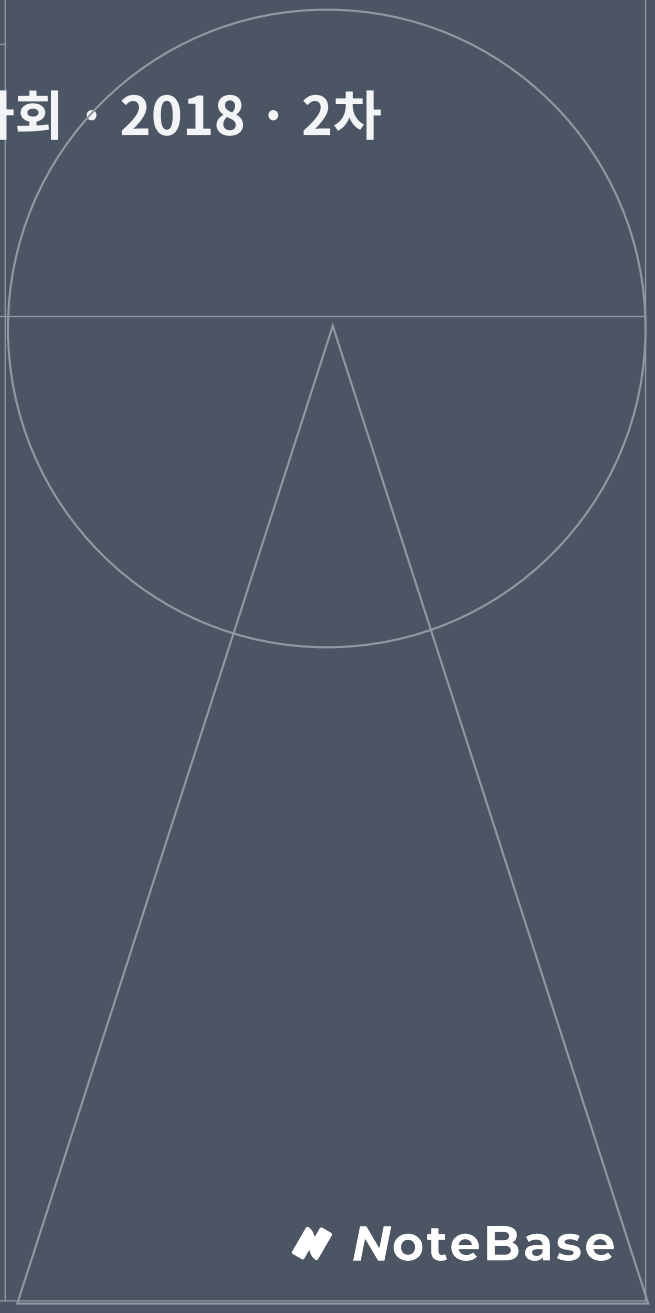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2차

문 1.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설정>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가)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연구 과정> A집단과 B집단을 나눈 뒤 A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 (나) > A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보기>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변인이다.
㉡ (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세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험 연구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분하고, 조작적 정의와 실험 설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독립변인은 연구자가 원인으로 보고 조작하거나 집단 간 차이를 두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 교육 실시 여부가 독립변인이고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측정된 종속변인이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안전 교육을 5개월 동안의 교육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최근 1년간의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로 정한 것은 조작적 정의이다.
실험집단은 처치를 받은 집단이고 통제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은 비교 집단이다. 실험 연구는 변인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인위적인 상황에서 얻은 결과를 현실세계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틀리다.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변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실제 연구에서 안전 교육 실시 여부가 독립변인이고, 운전 능력·태도의 변화 및 교통사고 감소는 교육의 영향으로 설명되는 결과이다.
② O — ㉣만 옳다. A집단에만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B집단과 결과를 비교하므로 실험 연구에 해당한다.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현실세계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③ X — ㉡과 ㉢은 모두 틀리다. ㉡의 '개념적 정의'는 '조작적 정의'로 고쳐야 한다. 또한 ㉢에서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이지만, 제시된 연구 과정에는 교육 후 조사만 있으므로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은 틀리며 '실험 처치 후에만 검사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은 틀리고 ㉣만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고른 이 선택지는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만 고른 ②이다.

오답 포인트

㉢은 집단 구분만 보면 맞아 보이지만, 연구 과정에는 처치 전 검사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추상적 개념을 기간·횟수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꾼 것은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가 차이를 준 원인이 독립변인이고 측정한 결과가 종속변인인지 확인한다. 이어서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었는지, 처치 전 검사와 처치 후 검사가 실제 연구 과정에 모두 제시되었는지를 문장 그대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원인을 조작하면 독립변인, 결과를 측정하면 종속변인,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바꾸면 조작적 정의이다.

NoteBase

문 2. 다음 甲과 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다음 관점과 관련되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甲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 행동은 자극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일어나며, 자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로 볼 수도 있고 객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의식은 타자에 의해 목격되고 이해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乙에 따르면 사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심장, 폐, 뇌 등과 같이 동물의 각 부위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위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한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각 부위는 전체로서 동물의 생존과 건강에 이바지한다.

<보기>
㉠ 甲은 개인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상뿐만 아니라 세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 甲은 대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乙은 개인들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乙은 현상을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기능론의 핵심 관점을 구별하고, 각 진술을 해당 관점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개인이 타인과 상징을 주고받고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아와 사회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상징, 의미, 해석, 상황 정의이다.
기능론: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보고, 각 부분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기능, 상호 의존, 안정, 조화이다.
따라서 甲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乙은 기능론이다. ㉠·㉡·㉢은 옳고 ㉣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 ㉣ 자체는 옳지만,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해석적 성격을 나타낸 ㉡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조합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은 옳지만, ㉤의 '乙은 현상을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한다'가 틀렸다. 상황 정의에 따라 행위와 사회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인 乙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인 甲이다. 또한 옳은 ㉠과 ㉡이 빠져 있으므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은 상징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아상과 세계상이 형성된다는 설명이고, ㉡은 행위자가 대상에 부여된 의미를 해석한다는 설명이므로 모두 甲에 해당한다. ㉣은 사회의 각 부분이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므로 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이다.
④ X — ㉠과 ㉡은 옳지만 ㉤은 乙이 아니라 甲의 관점이며, 乙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이 빠져 있다. 틀린 조합 '㉠㉡㉤'은 '㉠㉡㉢'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상황 정의'는 기능론의 '사회 안정'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대표 개념이다. 또한 조합형 문항에서는 포함된 진술이 모두 옳더라도 다른 옳은 진술이 빠지면 그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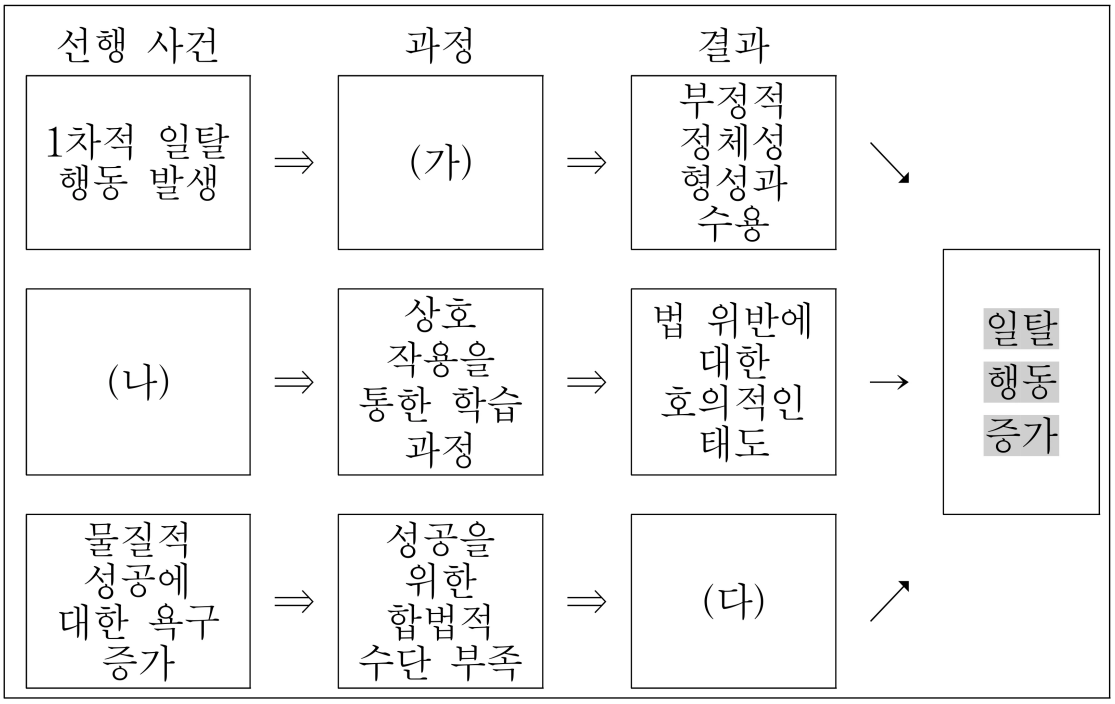
'상징·의미·해석·상황 정의·자아 형성'이 나오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 '유기체·상호 의존·기능·안정·조화'가 나오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각 진술의 참·거짓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전체 집합과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의미의 해석, 기능론은 부분의 기능과 전체의 안정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그림은 일탈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이다.)



<보기>

㉠ (가)에서는 일탈 행위 자체보다는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된다.

㉡ (나)에서는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교류가 증가한다.

㉢ (다)에서는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전환되고 목표와 수단이 일치된다.

㉣ (가), (나), (다)에서는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과 거시적 관점을 제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식의 인과 과정을 보고 (가)는 낙인 이론,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 (다)는 아노미 이론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낙인 이론은 사회적 낙인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학습,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핵심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만 고른 선택지이다. (가)는 1차적 일탈 이후 사회가 행위자를 일탈자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과정이다. 낙인 이론은 일탈 행위 자체의 객관적 속성보다 사회적 반응과 낙인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2차적 일탈을 촉진하는 데 주목하므로 ㉠은 옳다.

② X
㉠은 옳지만 ㉡은 틀리므로 ㉠과 ㉡을 함께 고른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므로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교류가 증가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일탈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법 위반에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을 학습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과 ㉢이 모두 틀리다. ㉡의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은 '일탈에 우호적인 집단'으로 고쳐야 한다. (다)는 아노미 이론이므로 ㉢의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전환되고 목표와 수단이 일치된다'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가 강조되지만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여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불법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X
㉢은 위와 같이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일치를 말한 점이 틀리며, ㉣도 틀리다. '(가), (나), (다)에서는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과 거시적 관점을 제시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이고, 특히 낙인 이론은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아노미 이론은 사회 구조 차원에서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오답 포인트

㉡의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된다'가 핵심 함정이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말하며, 아노미 이론은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일치가 아니라 그 괴리를 설명한다. 또한 세 이론을 모두 객관적·거시적 관점으로 묶을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식의 연결어를 먼저 확인한다. '낙인→부정적 자아 정체성→2차적 일탈'은 낙인 이론, '상호 작용→일탈 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 '성공 목표 강조+합법적 수단 부족'은 아노미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낙인은 사회적 반응, 차별적 교제는 일탈 학습, 아노미는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밑줄 친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학교의 동기 졸업생인 甲과 乙은 경찰관을 꿈꾸며 (나) 경찰 임용 스터디에서 같이 경찰 시험공부를 하였다. 乙은 공부를 하던 중에 (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렬 공무원 준비로 전환하면서 甲과 다른 길을 갔다. 이후 甲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이 되고, 적성과 흥미가 잘 맞아 비교적 빠른 승진을 하여 (라) 현재의 ○○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을 하는 乙은 甲을 볼 때마다 경찰관을 하지 않은 것을 (마) 후회했다.

<보 기>

㉠ (가)와 (나)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다)는 1차 집단이면서 乙의 내집단이다.

㉢ (라)는 甲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서 수직 이동이며 구조적 이동이다.

㉣ (마)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집단과 사회화 기관의 성격, 사회 이동의 유형,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차 집단은 가족처럼 친밀한 대면 관계가 중심인 집단이고,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개인이 성장 초기에 기본적인 생활 양식과 규범을 배우는 기관이다. 학교와 목적 중심의 스터디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다.

수직 이동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로 나타나고, 구조적 이동은 산업 구조나 직업 구조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나타난다.

소속집단은 실제로 속한 집단이고, 준거집단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 또는 열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두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보기 판단

㉠ X: (가) 학교와 (나) 경찰 임용 스터디를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학교는 대표적인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경찰 임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스터디도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두 집단 모두 목적 지향적 성격을 지니지만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 O: (다) 가족은 친밀한 관계가 중심인 1차 집단이며, 乙이 실제로 속해 있고 소속감을 갖는 내집단이다.
㉢ X: 승진으로 지위가 상승했으므로 수직 이동인 것은 맞지만, 甲 개인의 역할 수행과 성취에 따른 이동이므로 개인적 이동이다. '구조적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 이동'으로 고쳐야 한다.
㉣ O: 乙의 소속집단은 현재 종사하는 다른 직렬 공무원 집단이지만 경찰관 집단을 열망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가 후회로 이어진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로 고쳐야 한다.
② X: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로 고쳐야 한다.
③ X: ㉡은 옳지만 ㉢의 이동 유형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로 고쳐야 한다.
④ O: ㉡과 ㉣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은 학교와 스터디가 목적 중심의 집단이라는 점만 보고 1차적 사회화 기관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은 승진이라는 수직 이동과 그 원인에 따른 개인적·구조적 이동을 혼동하게 만든다. 승진의 원인이 甲의 적성과 역할 수행이라는 개인 요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 문제에서는 친밀성·사회화 시기·결성 목적을 각각 구분한다. 사회 이동은 먼저 상승·하락 여부로 수직 이동을 판단하고, 이어서 원인이 개인의 성취인지 사회 구조의 변화인지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을 가른다. 실제 소속과 판단·열망의 기준이 다르면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족은 1차 집단,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개인 성취에 따른 승진은 개인적 수직 이동이며, 실제 소속과 마음속 기준은 다를 수 있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지문이다. 지문의 맥락에서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조선후기에 명나라가 망하고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곧 (가) 중화(中華)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자의식의 성장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나) 진경산수화는 작품의 품평을 기록한 (다) 서적에 의해 소개된 중국 남종 화법을 정선이 수용하여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창안한 그림 양식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조영석을 거쳐 김홍도가 그의 기법을 더하여 (라) 꽃을 피웠다.

<보기>

㉠ (가)는 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이면서 물질문화에 속한다.

㉡ (나)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다)는 문화의 요소 중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직접 전파의 방법이다.

㉣ (라)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지는 축적성을 보여 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진경산수화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문화의 구성 요소, 문화 변동의 양상, 문화 전파의 방식, 문화의 속성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질문화는 도구·건축물·서적처럼 일정한 형태를 지닌 문화이고, 비물질문화는 관념·가치·규범·지식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이다.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3의 문화를 만드는 현상이고, 문화 동화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잃는 현상이다.

직접 전파는 사람 사이의 직접 접촉으로 문화가 전달되는 것이고, 간접 전파는 서적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문화의 축적성은 앞 세대의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문화가 풍부해지는 성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물질문화'가 틀린 표현이다. 중화라는 의식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에 해당하지만 형태가 없는 관념이므로 비물질문화이다. 따라서 ㉠만을 고른 ①은 옳지 않다.

② O
㉣은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다음 세대에 전승되고 김홍도의 새로운 기법이 더해져 더욱 발전한 모습을 설명한다. 이는 문화의 축적성에 해당하므로 ㉣만을 고른 ②가 옳다.

③ X
㉡의 '문화 동화'와 ㉢의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직접 전파'가 모두 틀렸다. 중국 남종 화법과 우리 산천을 표현하려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진경산수화 양식이 형성된 것은 문화 융합이다. 또한 작품의 품평을 담은 서적은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서적이라는 매체를 통한 전파는 간접 전파이다. 따라서 ㉡㉢을 고른 ③은 옳지 않다.

④ X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을 함께 고른 ④는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만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앞부분이 맞아도 '물질문화'까지 맞는 것은 아니다. ㉡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을 곧바로 동화로 판단하기 쉽지만, 새로운 문화 양식이 생겼으므로 융합이다. ㉢에서는 서적을 통한 전달을 사람 사이의 직접 접촉인 직접 전파와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태가 있는지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를 구분하고,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 여부로 동화와 융합을 구분한다. 전파 방식은 사람의 직접 접촉인지 매체를 거치는지 확인하며, 세대 간 전승에 새 요소가 추가되면 축적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식은 비물질문화, 새 문화의 탄생은 융합, 서적을 통한 전달은 간접 전파, 전승에 추가는 축적성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가)와 (나)의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경찰조직에서는 많은 종류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전문화시켰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적·개인적 사유로 교체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규칙과 절차를 잘 정리해 둔다.
(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더 비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게 되면 과다 행정으로 이어져 규제가 증가되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세금도 증가할 것이다.

① (가)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다.

② (가)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어 업무 성과가 확대된다.

③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다.

④ (나)는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가)는 분업·전문화와 규칙·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의 순기능을, (나)는 필요와 무관하게 조직과 인력이 팽창하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보여 준다.

핵심 개념

관료제는 업무를 분업하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조직 운영 방식이다. 업무의 안정성·지속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친 규칙 준수는 목표와 수단의 전도, 경직성, 조직의 자기 보존과 팽창 같은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 반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창의성, 높은 자율성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업무를 전문화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된다'이다.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의 관료제는 의사 결정이 경직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창의성·자율성의 신장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이라고 해야 한다.
③ O — (나)와 같은 관료제의 역기능에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절차 등의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목표와 수단의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O — (나)는 업무상의 필요가 줄어도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조직이 자기 보존을 추구하며 과업과 인력을 늘리는 관료조직의 팽창 현상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현대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가)의 핵심 단서인 '규칙과 절차'와 반대된다.
관료제의 장점인 안정성·공정성과 탈관료제의 장점인 창의성·자율성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업·전문화·명확한 규칙·위계가 보이면 관료제로 판단한다. 안정성·공정성·예측 가능성은 순기능이고,
경직성·목표와 수단의 전도·조직 팽창은 역기능이며, 창의성·자율성·유연성은 탈관료제의 특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관료제는 규칙으로 안정성을 얻지만, 지나치면 경직되고 팽창한다. 창의성과 자율성은 탈관료제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7. 다음 甲과 乙은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종속 이론과 근대화론 중 하나이다.)

甲: 경제는 전통 사회 단계, 도약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숙기 단계, 대량 소비 단계 총 5단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경제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합리적인 생활양식 등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가 근대화 된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을 따르고,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
乙: 저발전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이 저발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발전 국가의 발전은 어렵다.
<보기>
㉠ 甲은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 甲은 저발전 국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에서 찾는다.
㉢ 乙은 선진국의 근대화는 저발전 국가의 저발전에 의존한다고 본다.
㉣ 甲과 乙은 저발전 국가의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이 저발전의 원인과 발전 경로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대화론: 모든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보편적·단계적 발전 경로를 거친다고 보고, 저발전의 원인을 전통적 가치와 제도 등 사회 내부에서 찾는다.
종속 이론: 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부의 주변부 착취로 인해 저발전이 지속된다고 본다.
핵심 차이는 근대화론이 저발전의 원인을 주로 내부 요인에서 찾는 반면, 종속 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착취적 관계라는 외부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甲의 5단계 발전론은 모든 국가가 선진국과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보는 근대화론이다. ㉡의 틀린 표현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에서 찾는다'이다. 올바르게는 甲은 저발전의 원인을 전통적 가치와 제도 같은 저발전 국가 내부의 요인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 아니라 ㉠·㉢이 옳다.

② O
㉠과 ㉢이 모두 옳다. 甲은 보편적이고 단계적인 발전 경로를 가정하며, 乙은 중심부인 선진국의 발전이 주변부인 저발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 착취에 의존한다고 본다.

③ X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의 틀린 표현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이다. 올바르게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연결 및 착취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乙의 종속 이론이며, 甲은 저발전 국가 내부의 전통적 요인을 강조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④ X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은 甲의 근대화론이 아니라 乙의 종속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며, 그 경우에도 '단절'이 아니라 '불평등한 연결과 착취'가 정확하다. ㉣의 틀린 표현은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올바르게는 甲은 전통문화를 근대화를 가로막는 내부 요인으로 보고, 乙은 저발전의 원인을 전통문화가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의 착취적 관계에서 찾는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오답 포인트

㉡은 종속 이론의 '중심부·주변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甲의 설명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종속 이론의 핵심도 두 영역의 단절이 아니라 불평등한 연결과 착취이다. 또한 ㉣은 근대화론이 전통문화를 발전의 동력으로 본다고 뒤집었지만, 근대화론은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극복해야 할 내부 장애 요인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계적 발전·선진국 경로 추종·내부의 전통성'이 나오면 근대화론으로, '중심부와 주변부·불평등한 교환·착취·저발전의 지속'이 나오면 종속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대화론은 내부 전통성과 단계적 발전, 종속 이론은 외부의 착취 구조와 저발전의 재생산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보기>
㉠ (가)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는 입헌 군주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 (가), (나), (다)에 의해 보통선거와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영국 권리 장전,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의 핵심 원리와 각 문서가 가져온 정치적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는 영국 권리 장전으로, 국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의회의 권리를 보장하여 입헌 군주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는 미국 독립 선언으로, 천부 인권과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 저항권을 천명하였다. 이는 미국의 공화정 수립을 뒷받침한 문서이지 입헌 군주제 정부의 근거가 아니다.
(다)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법 제정 참여의 원리를 선언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다. (가)는 국왕의 권력을 법과 의회가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다) 제3조는 주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② X — ㉣이 틀렸다. 세 문서가 보통선거와 직접선거를 곧바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③ X — ㉡이 틀렸다. (나)는 국민의 동의를 정부 권력의 근거로 제시하고 미국의 공화정 수립을 뒷받침하였다. '입헌 군주제 정부'가 아니라 '공화정 정부'와 연결해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④ X — ㉣이 틀리고 옳은 ㉠이 빠져 있다. (가)·(나)·(다)가 보통선거와 직접선거를 직접 도입한 것은 아니므로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오답 포인트

㉡은 '국민의 동의'라는 표현만 보고 입헌 군주제와 연결하기 쉽지만, 미국 독립 선언은 군주제를 전제로 한 문서가 아니라 미국 공화정 수립의 이념적 근거이다. ㉣도 시민 혁명이 국민 주권을 내세웠다는 사실과 당시 즉시 보통선거·직접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주장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서의 핵심어로 판별한다. '국왕의 권력 제한·의회'는 영국 권리 장전과 입헌 군주제, '천부 인권·정부 교체의 권리'는 미국 독립 선언과 공화정, '자유·평등·국민 주권'은 프랑스 인권 선언과 연결한다. 정치 원리의 선언과 선거 제도의 즉각적 도입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영국은 의회와 입헌 군주제, 미국은 독립과 공화정, 프랑스는 자유·평등과 국민 주권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폭력배 동원, 투표권 강탈, 관권 개입 등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다.
(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집권층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① (가): 제2공화국 출범, (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가): 제3공화국 출범, (나):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③ (가): 제2공화국 출범, (나):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가): 제3공화국 출범, (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과 제2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흐름, 6월 민주 항쟁에서 6·29 민주화 선언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이 전개한 4·19 혁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 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요구가 수용되었고, 헌법 개정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결과는 제2공화국 출범이고, (나)의 결과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므로 두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 '(가): 제3공화국 출범'과 '(나):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제2공화국 출범, (나)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이다.
③ X — (가)의 제2공화국 출범은 옳지만, (나)의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이다.
④ X — (나)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옳지만, (가)의 '제3공화국 출범'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제2공화국 출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의 출범 시기를 혼동하거나, 1987년 개헌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4·19 혁명은 제2공화국, 6월 민주 항쟁은 5년 단임 직선제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의 원인과 핵심 요구를 먼저 찾는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면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을, 6·29 민주화 선언과 직선제 요구가 보이면 6월 민주 항쟁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4·19 혁명 → 제2공화국, 6월 민주 항쟁 →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A국가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 신문
□□년 □월 □일
甲당의 '연정 구성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진실은?
(가) A국가는 총선을 시행하여 총 의석수 300석 중에서 (나) '甲'당이 30석이 감소한 130석을 차지하고 '乙'당이 95석, '丙'당이 75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회에서 선출된 (다)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丙'당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丙'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기>
㉠ (가)는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와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에 유리하다.
㉡ (나)는 현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구성하고 있다.
㉢ (다)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라)는 각료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고 연립 정부를 추진하는 사례에서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헝 의회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국가의 총 의석은 300석이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인 151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었고 외교부 장관이 다른 정당과 연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A국가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판단된다.

핵심 개념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다. 헝 의회는 어느 한 정당도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각료가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NoteBase

적용 기준

㉠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구분하고, ㉡은 과반수 확보 여부를 계산하며, ㉢과 ㉣은 의원내각제의 내각 구성·책임 및 의원직 겸직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 ㉢, ㉣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틀리고 ㉡만 옳으므로 ㉠㉡을 함께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 올바르게는 '㉡㉢㉣'이다. ㉠의 정책 계속성과 의회 다수파 견제는 권력 분립과 임기 보장이 나타나는 대통령제의 장점에 가깝다.
② X — ㉡과 ㉢은 옳지만, 의원내각제에서 각료와 의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 올바르게는 '㉡㉢㉣'이다.
③ X — ㉠은 틀렸고 ㉡은 옳은데 이를 반대로 포함·제외했다. '㉠㉢㉣' → 올바르게는 '㉡㉢㉣'이다.
④ O — 甲당의 130석은 과반수 151석에 미달하므로 ㉡이 옳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옳고, 각료가 의원직을 겸할 수 있으므로 ㉣도 옳다.

오답 포인트

㉠의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와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를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 오인하기 쉽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가 장점이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다수당의 권력 집중 가능성이 있다. 또한 130석이 제1당이라는 사실과 과반수 확보는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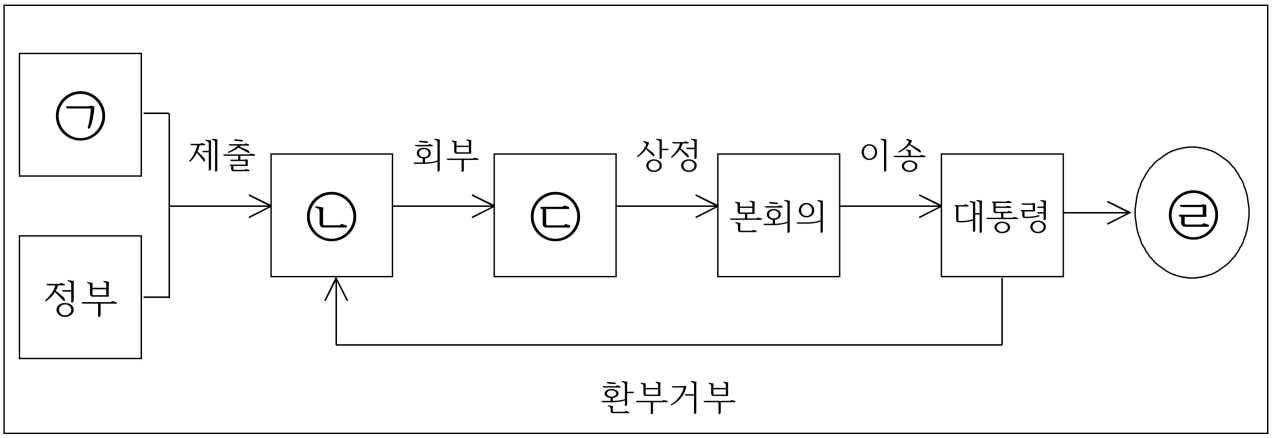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며 각료의 의원직 겸직이 가능하면 의원내각제로 판단한다. 헝 의회 여부는 제1당인지가 아니라 단독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파 기반의 내각,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각료의 의원직 겸직 가능이 핵심이다. 헝 의회는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의회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은 ㉢에 의해 임명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는다.

③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④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법률안 발의부터 대통령의 공포까지 이어지는 입법 절차에서 각 단계의 담당 주체와 법정 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회부는 국회의장이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절차이다. 공포는 확정된 법률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도식의 ㉠은 국회의원, ㉡은 국회의장, ㉢은 소관 상임위원회, ㉣은 공포이다. 기본 흐름은 법률안 제출 → 국회의장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회가 의장 1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정한다. 국회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 ㉡은 국회의장이고 ㉢은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임명 주체에 관한 앞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은 ㉢에 의해 임명되며' → 올바른 표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며'이다.
③ O — ㉢은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는 소관별로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의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므로 적절하다.
④ O — ㉣은 대통령의 공포이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맞는 설명 뒤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임명한다'는 틀린 설명을 결합한 선지이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회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주체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법 절차 도식에서는 각 칸을 기관명과 행위로 먼저 바꾼 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누가 선출하는가', '누가 공포하는가', '기간은 며칠인가'를 차례로 대조한다. 복합 선지는 일부가 맞더라도 한 부분이 틀리면 전체가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의원 10명 이상 찬성으로 발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1억 원에 매매하고자 부동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이를 본 乙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서로 매매가를 절충하여 9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받았다.
乙은 계약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금 3천만 원과 60일 후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② 乙이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④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 방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 의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해약금 =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계약금이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핵심 구분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당사자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잔금 지급만으로 이전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 甲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받은 계약금 1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액인 2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 틀린 표현: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 올바른 표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X
- 계약금을 준 매수인 乙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1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며, 법정 수수료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는 없다.
- 틀린 표현: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O
- 매수인 乙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 甲의 권리이전·목적물 인도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매매계약상의 의무이다. 따라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야 한다.

④ X
- 잔금을 지급해도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등기된다.
- 틀린 표현: 등기와 상관없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 올바른 표현: 잔금 지급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 내용이 변경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비율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해제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준 쪽인지 받은 쪽인지이다. ④는 잔금 지급이라는 채무 이행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금의 교부자와 수령자를 구별한다.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이다. 그다음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인도·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는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가)부터 (라)까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팔을 가격하였다.
(나)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 부상을 입혔다.
(다) 앞집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인의 용인 아래 불을 끄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라) 자신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우연히 만나 그를 붙잡았다.

① (가): 정당방위, (나): 정당행위, (다): 책임조각, (라): 자구행위
② (가): 정당방위, (나): 긴급피난, (다): 피해자의 승낙, (라): 자구행위
③ (가): 정당행위, (나): 자구행위, (다): 책임조각, (라): 정당방위
④ (가): 정당행위, (나): 긴급피난, (다): 피해자의 승낙, (라): 정당방위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를 사례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위난, 피해자의 승낙, 청구권 보전의 긴급성이라는 요건을 각각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법성 조각사유 = 겉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어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이다.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는 상당한 행위이다.
긴급피난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자구행위 = 법정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다.
피해자의 승낙 =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핵심 구분

형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행위는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일 필요 없이 현재의 위험을 피하는 행위는 긴급피난, 권리의 실현이 곤란해질 급박한 때 스스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행위는 자구행위, 처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피난, (다)는 피해자의 승낙, (라)는 자구행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강도 공격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이고 (라)의 절도범 체포는 자구행위이지만, (나)와 (다)의 연결이 틀렸다.
- 틀린 표현: (나) 정당행위, (다) 책임조각
- 올바른 표현: (나)는 맹견이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한 긴급피난이고, (다)는 주인의 용인 아래 문을 부순 피해자의 승낙이다.

② O
- (가)는 강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 (나)는 맹견의 공격이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한 긴급피난이다. (다)는 주인이 문 훼손을 용인한 피해자의 승낙, (라)는 귀금속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해 절도범을 붙잡은 자구행위이다.

③ X
- (가)부터 (라)까지의 연결이 모두 바뀌어 있다.
- 틀린 표현: (가) 정당행위, (나) 자구행위, (다) 책임조각, (라) 정당방위
- 올바른 표현: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피난, (다)는 피해자의 승낙, (라)는 자구행위이다.

④ X
- (나)의 긴급피난과 (다)의 피해자의 승낙은 맞지만, (가)와 (라)의 연결이 틀렸다.
- 틀린 표현: (가) 정당행위, (라) 정당방위
- 올바른 표현: (가)는 강도의 부당한 공격을 막은 정당방위이고, (라)는 귀금속에 대한 청구권을 긴급히 보전한 자구행위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맹견 공격을 정당방위로 보기 쉽지만, 정당방위에는 사람의 위법한 행위인 '부당한 침해'가 필요하다. 동물의 공격처럼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문제 된다. 또한 (다)의 '주인의 용인'은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의 원인이 사람의 부당한 공격이면 정당방위, 자연현상이나 동물 등에서 생긴 현재의 위험이면 긴급피난으로 판단한다. 소유자 등 처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의 승낙, 법정절차를 기다리면 청구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보전하면 자구행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람의 부당한 공격은 방위, 현재의 위험은 피난, 처분권자의 동의는 승낙, 급박한 권리 보전은 자구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표는 '기본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의미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권리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주권 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사회권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행복추구권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과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은 평등권, ㉡은 행복추구권, ㉢은 참정권, ㉣은 사회권이다. 현행 헌법도 법 앞의 평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선거권·공무담임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각각 규정한다.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 아니라 자유권의 핵심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평등권이다. 선지의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 ㉠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올바른 표현: ㉠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평등권이다.

② O
㉡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추구권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형성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표의 의미와 부합한다.

③ O
㉢은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거 등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며, 근대 국민주권 사상의 확립과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보편화되었다.

④ O
㉣은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평등권의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는 평등권이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 배제는 자유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 '간섭받지 않는다'는 자유권,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형성한다'는 행복추구권, '정치에 참여한다'는 참정권,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사회권이다.

암기 포인트

차별 금지는 평등권, 간섭 배제는 자유권, 정치 참여는 참정권, 생활 보장은 사회권이다.

NoteBase

문 15.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효율적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②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③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④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여(긴축재정)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시장 질서 유지, 공공재 공급,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며, 소득을 재분배하고, 재정 정책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것이다.
확장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 때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긴축 재정 정책은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할 때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② O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③ O — 누진세, 사회 보장 제도, 이전 지출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표현이다. 경기 침체 때에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 정책은 주로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억제할 때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물가 안정'이라는 익숙한 정책 목표를 붙여 긴축 재정 정책의 방향과 적용 시점을 뒤섞었다. 경기 침체에는 총수요 확대, 경기 과열에는 총수요 억제라는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 침체가 제시되면 세금 감소·정부 지출 증가·총수요 확대를,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제시되면 세금 증가·정부 지출 감소·총수요 억제를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침체에는 확장 재정, 과열에는 긴축 재정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갑국	3.3	2.3	2.4	-2.4
을국	3.5	2.3	2.1	0.1

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실질 GDP는 매년 증가하였다.

②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③ 을국에서는 2013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④ 갑국의 2014년과 2016년 실질 GDP는 같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감률이므로, 각 연도의 실질 GDP는 전년도 실질 GDP에 1+(경제 성장률)/(100)을 곱해 판단한다.

조건 정리

2012년 실질 GDP를 각국 모두 100으로 놓는다. 갑국의 성장률은 2013년 3.3%, 2014년 2.3%, 2015년 2.4%, 2016년 -2.4%이고, 을국의 성장률은 차례로 3.5%, 2.3%, 2.1%, 0.1%이다.

사용할 공식

당해 연도 실질 GDP=전년 실질 GDP×≤ft(1+(경제 성장률)/(100))
성장률은 기준 연도의 GDP 자체가 아니라 전년 대비 변화율이므로 매년 성장률을 누적해서 적용한다.

계산 과정

갑국: 2013년 103.3, 2014년 $103.3 \times 1.023 = 105.6759$, 2015년 $105.6759 \times 1.024 \approx 108.2121$, 2016년 $108.2121 \times 0.976 \approx 105.6150$이다.
을국: 2013년 103.5, 2014년 $103.5 \times 1.023 = 105.8805$, 2015년 $105.8805 \times 1.021 \approx 108.1040$, 2016년 $108.1040 \times 1.001 \approx 108.2121$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을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장률이 모두 양수이므로 실질 GDP가 매년 증가한다. 반면 갑국은 2016년 성장률이 -2.4%이므로 그해 실질 GDP가 전년보다 감소한다.
② X. 갑국의 2014년 성장률은 2.3%이므로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증가한다. 틀린 표현인 '감소하였다'는 '증가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을국은 모든 해의 성장률이 양수이므로 실질 GDP가 계속 증가하며, 가장 큰 해는 2013년이 아니라 2016년이다. 틀린 표현인 '2013년'은 '2016년'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약 105.6759, 2016년은 약 105.6150이므로 같지 않다. 2015년의 2.4% 증가와 2016년의 2.4% 감소는 적용 기준액이 달라 서로 정확히 상쇄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같다'는 '2016년 실질 GDP가 2014년보다 조금 작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같은 크기의 증가율과 감소율을 단순히 상쇄하는 것이다. 2.4% 증가 후 2.4% 감소하면 감소율은 증가한 뒤의 더 큰 금액에 적용되므로 처음 값보다 작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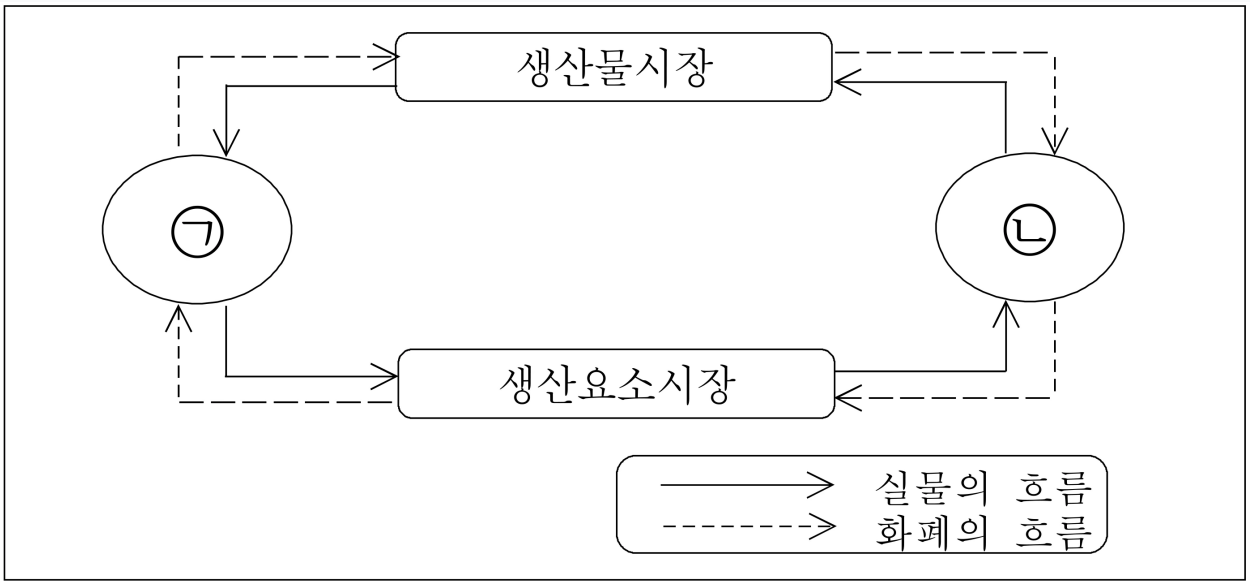
연속된 성장률 문제에서는 기준값을 100으로 놓고 각 연도마다 성장계수 $1+g$를 차례로 곱한다. 단순히 성장률을 더하거나 같은 비율의 증가와 감소를 상쇄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양의 성장률이면 전년보다 증가하고, 같은 비율의 상승과 하락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소비의 주체이고, ㉡은 생산의 주체이다.

② ㉡은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민간 경제 흐름에서는 소비재만을 가정함).

③ ㉠은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한다.

④ ㉡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간 경제 순환 도식에서 실물의 흐름을 따라 ㉠이 가계, ㉡이 기업임을 파악하고, 생산요소와 생산요소의 대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이고, ㉡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다.

② O
기업인 ㉡은 가계인 ㉠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생산물 시장에 공급한다.

③ X
㉠이 생산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임금·지대·이자가 아니라 노동·토지·자본이다. 임금·지대·이자는 가계가 노동·토지·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생산요소의 대가이다. 따라서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한다'는 표현은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기업인 ㉡은 생산을 위해 가계인 ㉠이 생산요소 시장에 공급한 노동·토지·자본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지대·이자를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생산요소와 그 대가를 뒤바꾼 선지이다. 노동·토지·자본은 가계가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요소이고, 임금·지대·이자는 기업이 가계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의 흐름부터 따라가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쪽은 가계, 제공하는 쪽은 기업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노동·토지·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이 임금·지대·이자를 지급한다.

암기 포인트

가계는 생산요소를 주고 소득을 받으며, 기업은 생산요소를 사고 생산물을 판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X재의 수요 및 공급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60	250	240	230	220	210
공급량(개)	200	220	240	260	280	300

①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260개이다.

②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공급표에서 직선형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구한 뒤, 시장균형과 종량세 부과 후의 균형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가격이 200원 오를 때 수요량은 10개 감소하고 공급량은 20개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을 P,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Q_d, Q_s라 하면 수요함수는 $Q_d = 290 - \frac{P}{20}$, 공급함수는 $Q_s = 140 + \frac{P}{10}$이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사용할 공식

세금 부과 전에는 $Q_d = Q_s$를 이용한다.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라고 할 때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P_c - 600$이다. 따라서 과세 후 공급함수는 $Q_s^t = 140 + \frac{P_c - 600}{10} = 80 + \frac{P_c}{10}$이 된다. 이는 세금이 소비자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 사이에 600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 균형은 $290 - \frac{P}{20} = 140 + \frac{P}{10}$에서 $P = 1000$이고, 이를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은 240개이다.
2. 세금 부과 후에는 $290 - \frac{P_c}{20} = 80 + \frac{P_c}{10}$이므로 소비자가격은 1400원이다.
3. 과세 후 거래량은 $Q = 290 - \frac{1400}{20} = 220$개이므로 과세 전보다 20개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균형가격 1000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모두 240개이다. 틀린 표현인 '균형 거래량은 260개'는 '균형 거래량은 240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가격 1600원에서는 공급량이 300개이지만 수요량은 210개이므로 90개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은 '1600원은 공급량이 300개가 되는 가격이며, 이때 90개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대체재인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수요량이 늘고 X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X재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가격은 1000원보다 낮아진다. 틀린 표현인 '1000원 이상'은 '1000원 미만'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개당 600원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과세 후 균형 거래량은 220개가 되어 과세 전 240개보다 20개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가격 600원에서의 수요량 260개를 균형 거래량으로 오인하게 한다. ②는 공급량이 300개가 되는 가격과 수요량·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을 혼동하게 한다. ③은 대체재 가격 하락이 X재의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게 한다. ④에서는 세금을 공급자가 낸다는 사실만 보고 소비자가격에서 600원을 빼는 조정을 누락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선형 표에서는 먼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공급량의 변화율로 두 함수를 만든다. 균형은 $Q_d = Q_s$로 구하고, 종량세가 있으면 소비자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세액과 같도록 공급함수를 조정한 뒤 새 균형 거래량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며, 공급자 종량세는 '공급자 수취가격 = 소비자가격 - 세액'으로 반영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표는 甲의 2018년 6월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입		지출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	조세	20만 원
		연금	30만 원
급여	25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30만 원
		식료품비	50만 원
		통신·문화·교육비	70만 원

① 처분 가능 소득은 50만 원이다.

②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적자였다.

③ 비소비 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크다.

④ 근로 소득만으로는 소비 지출 충당이 불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계 수입·지출표에서 소득,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처분 가능 소득 및 가계 수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전월 이월액과 당월 소득을 구분한다.
2. 지출을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눈다.
3. 각 합계를 선지의 금액 및 대소 관계와 비교한다.

핵심 근거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 50만 원과 통신·문화·교육비 70만 원을 합한 120만 원이다. 비소비 지출은 조세 20만 원, 연금 3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3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이다. 따라서 소비 지출이 비소비 지출보다 40만 원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급여 250만 원에서 조세·연금·은행 대출 이자 합계 80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다. '50만 원'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처분 가능 소득은 170만 원이다.'이다.
② X — 표의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은 5월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음을 뜻하므로 5월 가계 수지가 적자였다고 볼 수 없다. '적자였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50만 원의 흑자였다.'이다.
③ O — 소비 지출은 120만 원이고 비소비 지출은 80만 원이므로 소비 지출이 더 크다.
④ X — 근로 소득인 급여는 250만 원이고 소비 지출은 120만 원이므로 급여만으로도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 '충당이 불가능하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근로 소득만으로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전월 이월액 50만 원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착각하거나, 조세·연금·이자를 소비 지출에 포함하면 오답이 된다. 처분 가능 소득은 당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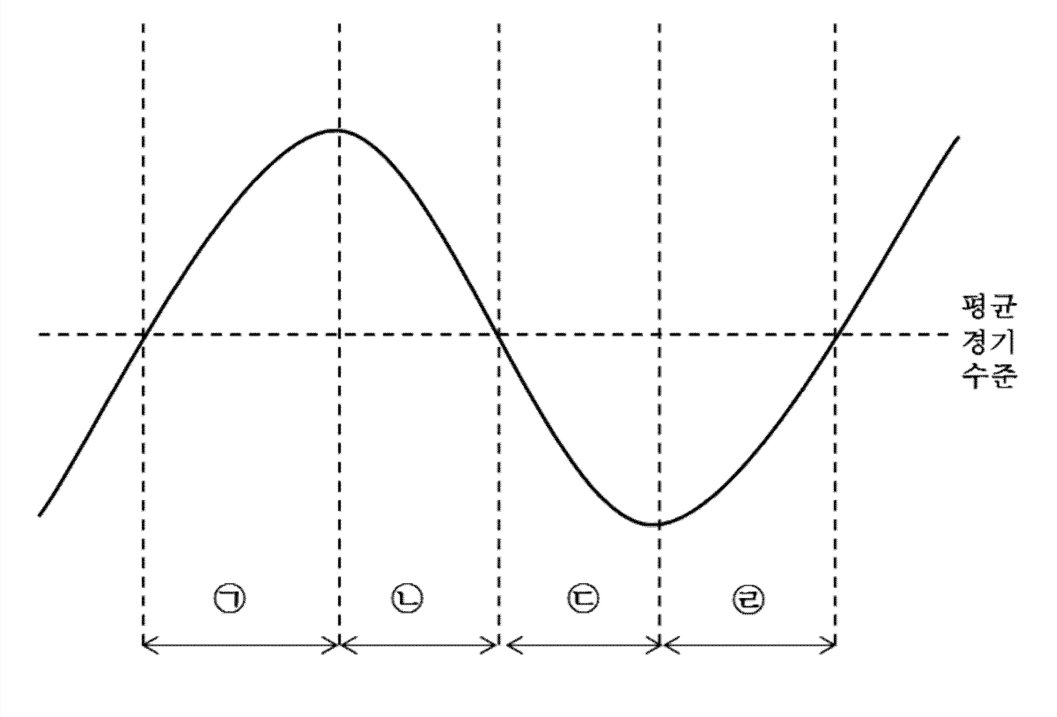
먼저 식료품비·통신비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은 소비 지출로, 조세·사회보험료 성격의 연금·이자는 비소비 지출로 분류한다. 그다음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처분 가능 소득 = 소득 - 비소비 지출, 이 문항에서는 250만 원 - 80만 원 = 170만 원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그림은 경기순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② ㉡은 경제활동 수준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시기로서 소비와 투자, 재고가 감소되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③ ㉢은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기 침체 시기로서 투자, 소비, 생산과 고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④ ㉣은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시기로서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증가하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기순환곡선의 방향과 평균 경기 수준을 기준으로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의 일반적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그림의 ㉠은 호황기, ㉡은 후퇴기, ㉢은 불황기, ㉣은 회복기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평균 경기 수준을 넘어 정점으로 상승하는 호황기이다.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총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② X — ㉡은 경기 정점에서 하강하는 후퇴기이므로 소비·투자·재고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수요가 둔화되므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진다. 틀린 표현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은 평균 경기 수준 아래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불황기이다. 경기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소비·생산·고용이 매우 낮은 수준에 이른다.
④ O — ㉣은 경기 저점에서 평균 수준을 향해 상승하는 회복기이다. 생산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고용·투자·소비가 증가하고 물가도 서서히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후퇴기에 실물 경제활동이 감소한다는 앞부분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뒷부분을 섞어 놓았다. 후퇴기에는 총수요가 둔화되므로 물가 상승 압력도 일반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곡선의 기울기와 평균 경기 수준 위·아래를 함께 본다. 평균 수준 위에서 정점으로 상승하면 호황기, 정점에서 하강하면 후퇴기, 평균 수준 아래에서 저점으로 하강하면 불황기,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면 회복기이다.

암기 포인트

호황은 활발·물가 압력, 후퇴는 감소·물가 상승률 둔화, 불황은 최저, 회복은 재상승이다.

NoteBase